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기술기반팀 이재식 팀장(2110-5510), 전성규 사무관(2110-5512)

연구장비 도입심사, 이렇게 간편·투명해집니다.

- 산업부,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諸규정 개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4.30일 개최한 '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'에서 연구장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키로 하였음

○ 동 개선내용은 산업부의 R&D 諸규정과 심의기관의 내부 지침이 개정되는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

□ 산업부는 국내 공공부문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의 50% 이상*을 담당하고 있으며, 장비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'06년부터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수행중

* '05~'10년, 총 4조 4,429억원의 정부 연구장비 투자 중 산업부(舊 지식경제부)는 53.9%(2조 3,936억원)를 차지 (국과위, '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보고서)

□ 금번 제도개선은 연구자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고, 장비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

①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류를 간소화하고, 사업 전담기관* 제출서류는 해당 전담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중복 제출부담 완화

- 또한, 서류 제출방식도 온라인방식으로 변경

* 정부가 R&D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

② 범용장비*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, 기술개발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도입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편의 제공

* 범용장비 인정기준은 '13.6월까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 마련할 예정

③ 연구환경의 변화와 장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의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최적의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

-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조성과제별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, 중복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음

④ 장비도입심의 요청서에 국내외 장비 비교항목을 추가하고, 국내 개발장비의 도입타당성을 심의토록 하여 장비개발을 유인

-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평가에 반영하여 장비활용률의 투명성을 확보

□ 금번 제도개선은 그간 연구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어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, 국내의 장비업체들에게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넓혀준 데 의의가 있음

○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공공부문 연구장비 구축현황을 정밀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'산업기술기반조성 전략포럼'을 운영중이며, 이번 연구장비 도입심사제도 개선방안은 그 첫번째 성과임 (추가로 3~4개 대책을 마련중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전성규 사무관(☎ 02-2110-5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